

“해상풍력은 국가전략사업…선도지역 전남 정책 지원”

김민석 총리, 산업 정책간담회서 밝혀 “공급망 관련 기업 글로벌 진출 도울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해상풍력이 이제 국가 전략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상풍력 산업계 정책간담회 인

사말에서 “기자재 제조, 전선 하부 구조, 선박 항만 운영, 유지 보수까지 여러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전략산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의 경쟁력은 공급망의 경쟁력”이라며 “국내외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

였다.

김 총리는 특히 “전남은 국내 해상풍력 본부를 선도하는 지역이고 여수는 그중에서도 핵심 거점”이라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체계

화하는 등 산업 발전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하려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넘어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며 2박3일간의 전남·광주 일정을 시작한 김 총리는 이날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64p(1.58%) 오른 8864.24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호남권 기업 ‘방산 진입~수출’ 밀착 서비스

방사청, 광주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호남권 기업의 방산 진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17일 문을 열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는 방산 분야 진입 컨설팅을 비롯해 수출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창구다.

광주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는 호남권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지역 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광주·전북·전남 국방벤처센터와 연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는 판교·구미·창원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해 지역 산업과 국방산업 간 연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석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광주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 개소가 호남권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코스피 증가 기준 최고치

17일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80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137.64포인트(1.58%) 오른 8864.24로 장을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8801.49)를 경신했다. 지수는 104.47포인트(1.20%) 내린 8622.13으로 개장, 한때 1.67% 오르며 8872.18까지 기록했다.

코스닥은 1.20포인트(0.12%) 오른 1019.88에 개장, 13.28포인트(1.30%) 오른 1031.96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뎀 과징금의 최대 10% 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5000여만 원이었다.

개정에 따르면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증거 수준을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비단 같은 머릿결 부탁해요 단오를 앞둔 17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열린 단오 세시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창포물 머리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패스에 기후동행카드 장점 결합 ‘플러스’ 출시

K-패스 이용자, 추가 발급 없이 혜택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기권인 ‘모두의카드(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교통비 이용 규모와 방식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중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선택 폭을 넓히고 혜택을 늘렸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모두의카드처럼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받는다.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은 최대 53.3%를 환급받는다.

월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광역버스나 광역철도 등 요금 수준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월 10만 원의 ‘플러스 정액권’도 출시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 서울달과 서울식물원 및 서울대공원 할인 혜택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에도 유지된다. 청년 할인 대상은 만 35~39세와 제대 군인(만 42세 이하)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7월 말까지 충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발급 없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의 기후동행카드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쓸 수 있던 것과 달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의 할인과 환급 혜택은 서울 시민에게만 제공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발급받고 이용하려면 21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6개 모바일 앱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선불형으로 쓰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선불카드를 판매한다. 연합뉴스